

“새만금 수질개선, 해수유통 없인 어려워”

민주 신영대·이원택 의원 “2단계 수질개선대책 평가 후속대책 논의서 도민 납득할수 있도록 검증 이뤄져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 용역 평가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수질 대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자 했다”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수유통이 확대되지 않으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한 용역을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2단계 수질개선대책 평가와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전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환경 분야로만 결론을 내지 말고 전북 도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해 김제, 부안, 군산 등 관련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수유통에 앞서 ▲새만금 마스터 플랜상 개발하기로 한 곳은 개발 ▲상류 수질개선사업 지속 ▲농업용수 공급방안 대안 마련 ▲수질개선을 위한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팀 구성 등 4대 방안이 전제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의원은 또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해수유통이나 담수가 결정된다고 해서 새만금 사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은 그대로 갈 것이고 속도감 있게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사진 왼쪽)과 신영대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남원시의회, 소식지

‘남원의정’ 발간

남원시의회는 21일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생생하게 담은 소식지 제41호 남원의정을 발간했다.



이 소식지에는 제8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물론, 위원장의 의정활동 포부가 담겨있으며,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응원하는 전제 의원의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234회 임시회부터 제237회 정례회까지의 5분 발언 및 시정질문과 각종 안전처리 현황이 요약되어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전반적 활동이 정리된 페이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매년 반기별로 발간되는 이 소식지는 구독신청을 통해 우편으로 배송 받거나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양희재 의장은 발간사에서, “수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남원시민의 발전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문 대통령,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서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아”

“수사권 개혁,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잘해줄 것”

“공수처 출범 지연... 당정청 합심해 野와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버거는 큰일”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 법제화한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빨리 첫발을 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며 당부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

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던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아담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뛰어드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박덕흠, 의원직 사퇴하라”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전면 부인에 “적반하장격”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할 것”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 뻔뻔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부 시스템, 검찰, 장관, 서울시장 등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백지신탁과 관련해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며 “하지만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표명 등을 해서는 안 되므로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

정활동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 가족기업 주주의 백지신탁은 실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 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부당할뿐더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그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 계약 수주 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했다”며 “잘못 없다는 억지 변명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또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정활동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 가족기업 주주의 백지신탁은 실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 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부당할뿐더러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그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 계약 수주 간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했다”며 “잘못 없다는 억지 변명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또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공정경제 3법’ 김종인에 반기?

국민의힘 내부 반발 조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당내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앞서 정강·정책 개혁, 국우 세력과의 선 긋기 등 김 위원장의 전향적 행보에도 잡음을 내지 않았던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당 내부에서는 상법·공정거래법의 전반적 개정이 자유시장경제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21일 “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언급하며 내부 이견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2항) 신설을 주도한 김 위원장으로서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경제에 주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등 현실론을 내세우며 반기를 들고 있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일명 ‘독소조항’은 반드시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 쟁쟁하다”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태홍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 부분 없이 이상적으로 가다보면 그런 법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기업에 미치는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면 경제 3법과 같이 노동법도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혜진 의원도 “지금은 빈사 상태에 빠져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를 오히려 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정말 필요성이 인종에서 하더라도 독소조항(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3개는 빼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정부·기재·예결위 분야를 담당하는 제1정조위원장 류성걸 의원은 “정책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해야 하니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담위로 맞고 틀리는 것도 중요하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차원과 현실적인 부분, 전문가나 현장에 계신 재계·경제계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지만 이중규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이용호 의원, 23일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 비대면 토론회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킹(대표 문옥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약의 치료 접근성과 관련한 그간의 정책과 효과성을 고찰하는 한편, 환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약 접근성의 향상은 평균 사망 연령의 증가 및 생존율 상승,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감소 등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연구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여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환자들이 혁신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 이



이용호 의원은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군산시의회, “새만금 수변도시 재추진 재검토해야”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장단은 21일 새만금개발청을 향의 방문하여 새만금 수변도시 재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수변도시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는 마무리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수변도시 매립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수변도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번영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할 새만금사업을 현재 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켜 국책사업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기본은 깨끗한 수질확보와 개발의 공존인데도 6등급이라는 최악의 수질에 대한 개선 없이 수변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또다른 새만금 수질의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제2의 시화호 및 제2의 4대강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지방이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2만5,000명 규모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수변도시로 인한 기존 도시의 공동화 가속 및 낙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한정복 기자